

# 한국 교육학 60년, 회고와 반성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 신 일

## 1. 교육학회 60년 성장

한반도에서 3년째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3년 4월, 피난지 부산에서 학회를 설립한 한국교육학 첫 세대의 열정은 놀랍고도 존경스럽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남겨진 것은 빈곤과 혼란뿐인 상황에서 새로운 독립국가를 채 정착시키기도 전에 전쟁이 터져 전국을 불태우고 파괴하였으니, 교육을 위한 변변한 시설, 교구, 교재가 있을 리 만무하였다. 교육을 위한 자원이라고는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열이 거의 전부였다. 교수들의 봉급도 매우 낮고 불규칙적이었는데, 이런 상태는 그 뒤로도 오래 지속되었다. 여기에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 교육학 제1세대 47명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임시교사에 모여 한국교육학회를 창립하고, 연차대회와 월례발표회를 시작한 것이다.

대학에 학부과정의 교육학과는 해방 이듬해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8월에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교육학과가 설치되고, 10월에는 대구사범대학(경북대학교 전신)에 설치되었다. 그 뒤로 몇 년 간격을 두고 중앙대학교, 연희대학교(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도 교육학과 문을 연다. 대학원도 학부과정에 이어 설치되지만 초기에는 석사과정뿐이었고, 박사과정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개설되기 시작한다.

교육학 1세대 선배들의 고뇌는 컸다. 일제 식민지 교육을 탈피하여 새로운 민주교육을 수립하고, 해방공간의 이념 대립과 투쟁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며, 피폐하고 혼란스런 사회경제적 상황을 극복하면서 올바르게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새로운 교육의 철학과 방법을 연구하고 제시할 무거운 사명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거치고, 1948년에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어 분단체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으므로 새 나라의 교육은 교육학회가 창립될 당시에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므로 식민지 교육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교현장에는 식민지 교육의 여파가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이승만 정권의 권력기반의 영향으로 학교와 행정기관이 식민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대부분 지배되고 있었던

국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더구나, 정권은 민주적 민족교육의 건설에는 등을 돌리고 정권의 연장에 몰두하고 있었다. 결국 초대 교육학계는 안타깝게도 식민지 교육의 청산과 새로운 민주국가 교육의 건설이라는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 1960년에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트리는 4·19혁명이 일어났지만, 바로 1년 후에 5·16 군사정권이 등장하여 강력한 국가지배의 교육체제를 수립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열망과 희생은 세계 어디에서도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치 높았다. 그들은 높은 학력 취득이야말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녀에게 만들어 주어야 할 부모의 최대 의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하여 공교육 체제이지만 교육비는 학습자 부담이라는 모순 속에서도 학교는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1950년대에 초등학교, 1960년대에 중학교, 1970년대에 고등학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학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오늘날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라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교육현장의 팽창은 교육학계의 확대로 이어졌다. 대학의 교육학은 교육학과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초등교육, 특수교육, 교육공학, 평생교육 등 교육분과학의 학과로, 그리고 교육대학원으로 거의 모든 대학에 설치될 정도로 파급되었다. 그에 따라 교육학회도 신속한 성장을 이루어 현재 지역분회 10개, 분과학회 23개, 등록회원 4,623명에 이르는 대규모 학회가 되었다. 한편 학회 회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분화 경향이 나타나, 회원들이 모학회보다 분과학회 중심의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모학회가 위축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모학회와 분과학회들은 경쟁관계일 수 없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양자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모학회는 모든 회원들의 관심사가 될 보편적이면서도 분과학들의 절실한 쟁점과 연결되는 주제를 부단히 발굴하여 학술적 담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의 지적 활동을 자극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학회를 포함하여 한국의 교육학계는 지난 60년간 괄목할 만치 성장하였다.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학술대회를 1959년부터 매년 1회 2~3일간 개최, 1993년부터 춘계, 추계로 연 2회 개최.
- 23개 분과학회들은 연차대회와 정기발표회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으며, 분과학회로 분산되어 있는 회원들의 소속감을 모학회로 모으는 방안이 논의 안건으로 등장하는 상태.
- 1963년부터 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연 4회 계간으로 발행.
- 분과학회들은 각각 자체의 정기학술지를 발행. 다수의 대학 교육학과와 교육 관련 연구기관들도 정기학술지 발행. 국내 학술지의 SSCI 인정.
- 회원들의 우수 학술업적을 선정하여 1972년부터 '학술상'과 '논문상'을 시상. 논문상은 1994년부터 '교육학박사학위논문상'으로 전환하고, 2009년부터 '운주논문상'을 신설

- 교육학자들의 연구 및 논문 발표가 대폭 증가하고 국제적 우수한 학술지 논문 게재도 급속 증가.
- 교육학자들의 국제적 학술활동 크게 확대되고, 인지도와 위상이 빠르게 상승.
- 국제적 상위급 대학들의 한국대학 출신 유치 증가.

## 2. 교육개혁 노력

한국의 교육과 교육학이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였지만, 문제도 함께 확대되고 더욱 악화되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은 ‘입시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간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학교는 비인간적 조직으로 변질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높아졌다.

당연히 교육학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의 개혁은 교육학자들에게도 당장 추진해야 할 급선무가 아닐 수 없었다. 교육의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하며,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가 선택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학의 시급한 과제였다. 교육학계는 한국교육의 개혁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의 주제를 정리해보면 교육개혁에 얼마나 관심을 집중하였는지 드러난다. 학회가 1959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개최한 학술대회 70회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5회의 주제가 교육개혁에 관한 것이다. 1963년의 “한국교육의 새로운 설계”를 비롯하여, “교육개혁의 방향”(1974), “한국교육의 새로운 좌표”(1977), “각국의 교육개혁 동향”(1984) 등, 교육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를 끊임없이 이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론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학자들이 교육을 망친다는 듣기에 민망한 비난이 일찍부터 사회 각계로부터 들려왔다. 교육학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풍조까지 높아졌다.

교육학계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회를 비롯한 교육학계의 교육개혁론이 교육의 방향 및 관리 체계에 있어서의 근본적 문제와 교육제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배 구조상의 문제와 같은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문제에 도전하여, 국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제시하고 추동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다수 개혁론은 정부의 정책방향 범위 내에서 미시적이고 표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 다만 해방공간과 4·19 후 짧은 1년 동안에는 민주사회의 교육을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주장들이 적지않게 제시되고 활발하게 논의 되었지만, 권위주의적 정권이 강화되면서 그러한 논의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그 전후에 소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많은 부분이 당시의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동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학회의 학술대회에서는 교육개혁에 관한 것 말고도 그때그때 정부의 교육현안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주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도 비판적 관점에서 보다는 동조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일이 흔했다. 그러다 보니 교육학계 밖으로부터의 비난뿐만 아니라, 학계 내부로부터도 “우리 학회가 집권자와 정부에 기술 자문하는 수준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거나, “국민들은 교육 분야에서 국가사회의 앞길을 내다보는 혜안을 던져줄 비판적 지성을 요청하는데, 교육학계가 그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다.

### 3. 무엇을 위한 교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논의는 계속된다. 그런데 1960년대에 정부가 경제성장을 국정의 기본 목표로 정하고 국가의 모든 제도적 장치와 자원을 여기에 집중하면서 교육도 그 틀 속에서 관리된다. 그 영향으로 이후의 교육개혁론은 대체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발전교육론 중심으로 전개된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발전교육론은 넓은 의미에서 도구주의 교육의 하나인데, 도구주의 교육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교육 시대에 뿌리를 내리고 해방 이후에도 정부의 성향에 따라 다소간 기복은 보였어도 계속 유지되었다.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지 못한 가장 큰 결과이다. 교육을 도구로 규정한다는 것은 학습자 즉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고, 경제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교육이 뿌리내려 있는 토양이었으므로 그 위에서 발전교육론은 빠르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교육에는 적어도 네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정답 지식, 기계적 행동 훈련, 경쟁 조장, 자연 지배 가치관이다.

정답 지식은 자유로운 사고를 통하여 ‘발견’하고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무조건 암기를 통하여 수용하도록 강요되는 지식이다. 표준화된 지식의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답 지식을 지향하는 학교는 정답만 가르치므로, 학생은 모든 시험에서 정답을 맞춰야 한다. “정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다른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른 것은 모두 오답일 뿐이다”라고 믿도록 훈련시킨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기 방식으로 사고하거나, 다른 답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열등생이나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답을 빨리 골라내는 훈련에 열중할 일이고, 자유로운 생각하거나 정답 고르기에 도움 되지 않을 책읽기 같은 것은 학교 졸업 후에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정답을 잘 맞추는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수가 점점 소수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정답을 못 맞추는 ‘실패자’로 분류된다. 상급학교

일수록 극소수의 ‘성공자’에 다수의 ‘실패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들이 사물을 보는 관점은 정답 아니면 오답, 흑 아니면 백, 우리 편 아니면 적군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굳어진다.

기계적 행동 훈련은 대량생산을 위한 자동화 기계장치 하에서의 노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동화 기계장치에 연결된 집합노동에 있어서 기술적 동작과 생리적 리듬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야 하고, 감정도 통제되어야 한다. 작업 매뉴얼과 상급자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매뉴얼과 지시에 잘 따르고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습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훈련을 위해서 학교는 집단생활과 집단활동을 세밀하게 통제한다. 1980년대까지는 두발과 의복도 철저히 통제되었다. 통제에 잘 따르면 모범생으로, 벗어나면 문제학생으로 분류된다. 군대도 이런 훈련을 기본으로 삼고, 병영 내에서의 생활도 그렇게 통제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기에 학교교육에 못지않게 기여한 조직이 군대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성들은 징병제에 의한 군대생활을 통하여 통일된 집단적 조직활동 경험을 수년간 받았는데,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던 농어촌 청년들에게는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고, 제대 후의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통제적인 집단훈련식 교육은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추진에 이용되었지만, 자아실현을 위한 개성의 신장, 창의적 활동, 사회의 민주화 등의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되었다.

경쟁 조장은 공감과 협동을 위한 교육보다는 이기적 의식과 경쟁을 위한 교육에서 더욱 강화된다.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체제의 강화가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추기보다는 획일화하고 통일하여 경쟁 트랙은 되도록 단순화하고 점수 간격은 세분화함으로써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든다. 상급학교 입학선발에 있어서도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보다는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기회의 폭이 넓을 수록 학생들 간의 경쟁 강도는 높아진다. 소수의 이른바 명문대학일수록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극심한 상급학교 입시경쟁 체제에서는 별도의 보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높아져서, 사회적 지위와 부의 대물림에 교육이 이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자연지배 가치관은 유럽에서 근대화가 시작될 때부터 강화되었다. 즉 자연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지배하고 활용할 대상이라는 인간 중심 자연관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하는 지배자라고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였다. 이 가치관에 따라 서구인들은 자연환경을 이용하기 위하여 파헤치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자연 파괴의 피해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경제성장 교육은 이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자연은 크게 파괴되어 그 해독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실천이야말로 인류와 지구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

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성장 교육은 그 자체로도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교육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우리 학교에서 실현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위에 언급한 정답 지식, 경쟁 조장, 기계적 행동 훈련, 자연 지배 가치관이 주도하는 교육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전시용 교육 행사라면 몰라도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자유로운 비판적 사고를 기본으로 삼는 인문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면서, 한국의 학교에서는 왜 이런 것을 기르는 교육을 하지 못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이 창의성이다. 창의성 교육이 어떤 교육 방법적인 처방이나 교사 한 두 명의 노력에 의해서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위에서 말한 경제성장 교육의 특성이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 학교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특성들이야말로 창의성을 억제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잃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독재정권과 성장주의 시대에 도구주의적 교육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1995년에 5·31 교육개혁 방안이 성안되어 이후 10년여간 이 방안을 토대로 개혁이 진행된다. 그러나 2000년대 말 보수적 정권의 집권으로 교육에 복고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육정책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어 경쟁교육이 심해진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추세에 따라 국가권력이 약화된 공간에 자본과 대기업이 지배력을 확대하여 경제성장 교육론이 탄력을 받는 중이다.

결국 교육의 총체적 체제가 문제다. 교육의 방법이나 몇 가지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발전교육론과 나아가 도구주의적 교육론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혁파하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태두인 아담 스미스는 경제성장 교육에 나타나지는 그런 교육에는 반대했던 것이다. 그가 <국부론>에서 산업화 초기 영국 방직공장의 비인간적 노동조건에서 하루 종일 기계처럼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제안한 것은 공장노동자 대상의 기술 훈련이나 집단규칙 훈련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하루 종일 방직기와 함께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단순한 노동에서 헤어날지 못하는 소년들이 지적 사고의 기회를 잃고, 인간적 감정을 교류할 기회도 없으며, 그들이 살던 푸르른 자연으로부터도 격리된 비인간적 노동환경의 해독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사고하고 인간적 감정을 교류하며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에 스미스의 이 주장을 인용하면서 옳은 생각이라고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의 후예라는 시장주의 경제기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교육행정가들은 학생들에게 시장적 경쟁원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4. 교육학의 정체성

한편, 교육학의 선구자들이 새로운 국가를 위한 새 교육의 건설을 위해서나 교육개혁의 논의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고 깨달은 것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 내지 적어도 각자의 교육관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교육은 무엇이고, 교육학은 무엇인가? 교육학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다. 교육학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경험이 다양했다. 식민지 교육을 받은 사람,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 미국에 유학한 사람,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었는데, 배경에 따라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은 당연했다.

교육학회는 학술대회의 주제로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내용을 자주 선정한 편이다. 학회의 학술대회 70회 가운데 ‘교육학의 성격’(1967), ‘한국 교육학의 과제와 전망’(1979), ‘한국 교육학 이론체계의 모색’(1983), ‘교육학의 학문적 이론 수립의 현황과 발전 좌표’(2002) 등을 포함하여 교육학에 관한 주제를 11회 내세웠다. 이 가운데 1967년의 학술대회는 정범모 교수와 이규호 교수가 경험과학적 교육학론 대 규범철학적 교육학론으로 대립하여 회원들의 관심을 크게 끌어들이는 토론을 전개하였고, 이 쟁점은 이후 수십년간 젊은 학자들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 교육학의 주류는 교수 패러다임 또는 과학적 교수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란 원하는 행동 특성, 즉 어떤 지식, 가치관, 기능이라도 누구에게나 계획을 세워 길러주는 또는 변화시켜주는 활동이라는 것이 대표적 정의이다. 어떤 지식을 길러줄 것이냐? 어떤 지식을 널리 전파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행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관한 문제는 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교육자는 그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는 과학적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기본적 임무라고 주장한다. 결국 교수 목표의 달성에 관심 집중하여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낼 교육목적에 대한 연구와 결정 과정에는 관심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 어느 면에서 보면 과학적 교수방법의 개발이라는 “과학주의”를 보호막으로 삼아, 교육의 사회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비친다. 사회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교육문제에서조차도 구조적 쟁점, 철학적 쟁점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 볼 일이다.

그런데 과학적 교수이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것인가? 이 이론을 주장하는 책들을 보

면 매우 이상적이어서 학교의 일반 교사들에게는 거의 비현실적이다. 존 듀이는 이렇게 썼다.

사고훈련 방법은 교사가 사고훈련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궁리하고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까지 포함하며, 아동의 호기심, 반응, 정연한 활동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학교 환경 속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교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존 듀이, 정희욱 역. 2011. *How We Think*. 학이시습. 54).

이 말은 어느 한 종류의 사고방식을 학생에게 성공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교수방법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할지 모르는 행동은 물론이고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환경요소를 교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어느 교사가 이런 계획을 짤 수 있으며, 과연 시행할 수 있을까.

## 5. 시각의 확장

기존 교육 패러다임은 학교를 전제로 한 것이고, 학교교육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산업국민국가 시대의 산물이다. 즉 사람을 아동 청소년기부터 국민으로 기르고 산업인력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혁명에 기인한 평생학습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 시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교육의 장이 학교로부터 사회로 확장된다. 과거에도 학교 밖에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말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 밖 교육의 양적 확대와 전문성 향상이다. 이제는 학교나 대학을 상대로 경쟁하는 교육조직과 시설도 적지 않게 늘고 있다.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학력이나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비형식 교육기관들 가운데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교육학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학습 시기가 생애 초기,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로부터 평생으로 연장되어 성인기와 노년기에도 학습이 생활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유아기 교육도 과거에는 선택 사항처럼 인식되었지만, 평생학습 시대에는 평생에 영향을 미칠 학습의 기초 능력과 태도가 이 시기에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성인기와 노년기 학습자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경시되었기 때문에 이론과 지식이 한정되어 있다. 교육학의 미개척지나 다름없다.

교육과 학습의 장에서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 종래에는 교사 즉 교수자에게 주도권이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으나, 점차 학생 즉 학습자에게 옮겨가고 있다. 사실, 교사 뒤에는 학교, 교육청, 국가 권력,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자본이 자리 잡고 있어서 때로는 감독하고 지시하



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교사의 권위를 보장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대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어느 때인가는 정부기관이 조정자 위치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과거에 비하면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서 학습자 중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 요즘의 학교에는 학생/학부모와 교사/학교 간 대결 구도가 자주 나타난다. 학생의 권리를 조례를 통하여 보장하려는 지자체에서는 갈등도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출발 단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고, 그것이 정리됨으로써 새로운 시대로 안정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 교육학계가 피하거나 배제당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교육시대를 여는데 중심 역할을 하기 원한다.

학교 밖의 학습 공간에서는 학교에 비하여 훨씬 더 학습자의 주도권이 강하다.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온라인 학습 공간처럼 학습자가 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교수자가 없거나 역할이 제한적인 학습 공간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자기주도 학습 또는 자율적 학습이라 부를 만한 활동이 다양하게 벌어진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학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만약 계획적 교수활동만을 교육이라고 규정한 정의를 충실하게 지킨다면, 교수자와 무관한 학습이나 교수자가 최소한의 보조만 제공하는 학습은 누가 연구할 것인가. 교육학의 시각을 확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결론으로, 시대는 민주적 시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의회제도나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민주적 시민사회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시민의 민주 역량이 관건이다. 시민의 민주 역량은 지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향상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정답 맞추기 훈련과 다르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제대로 안되면 다시 해보는 것이다. 틀린 것은 잘못이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그것은 학습의 중요한 과정일 뿐이다. 정답을 찾지 못한 것을 잘못으로 규정하고 실패자로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해로운 교육이다. 자율적 학습자라면 동료 학습자들을 찾아 선학(先學)과 후학(後學)의 관계를 만들면서 함께 진행하면 더욱 힘이 된다. 옛 선인들은 많이 앞선 선학이 있으면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가 배웠듯이, 선학을 찾아가 가르침을 베풀도록 청할 일이다. 이런 학습과정을 거침으로써 주체적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방식을 전문적으로 조언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학습제도의 한 모습이겠다. 사회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교수방법에만 몰두하는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교육학이 아니라, 자율적 학습 지원에 의한 시민역량의 향상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의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학습학을 시대는 요청하고 있다.